

동개혁을 추진해 쓰러져가던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친(親)노동 진보정당인 사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정부가 개혁을 주도했죠. 이 정부가 거울로 삼아야 할 대목입니다. 현 정부는 노조를 깊이 있게 알고 있는 만큼 설득할 능력도 있습니다.”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임기 후반에 가장 중점적으로 챙겨야 할 정책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뒤야 할 것은 규제개혁입니다.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매달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를 정례화해야 합니다. 관계 부처 장관들과 각 정당 관계자, 언론인,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이 장관들로부터 규제개혁 내용과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점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은 2년 반의 임기 동안 규제만 깨뜨린다는 각오로 나서야 우리 경제가 활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 앞에도 ‘규제개혁 상황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규제를 개혁하면 일자리는 저절로 생겨납니다. 규제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민의 이해와 협조는 필수입니다.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개혁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합니다. 정부도 각 부처와 부서별 소통을 바탕으로 개혁 의지와 시각을 일관된 형태로 정리해야 합니다.”

▷정부가 되레 시장 규제를 강화한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부작용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경제의 기존 상식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대표적입니다. 자장면 가격을 제한하면 양이 줄고 재료가 부실해지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고 부실공사가 늘어날 겁니다. 소비자들이 치러야 할 전체 비용은 커집니다.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고 시장원리를 무시한 정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부 확장 재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확장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재정 남발이라는 우려가 엇갈리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확장 재정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 없지요. 재정은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한 ‘불쏘시개’ 역할에 그쳐야 합니다. 지나친 확장 재정은 민간의 투자·소비를 위축시키고 재정건전성을 무너뜨립니다. 종종 재정지표를 비교할 때 재정이 취약한 유럽 국가 사례를 거론하면서 ‘우리는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 상당수는 유로존에 속해 기축통화인 유로화를 쓰기 때문에 외환위기 걱정이 없습니다.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를 쓰는 한국은 다릅니다. 국고가 비면 국제시장에서 자금을 빌리지 못하고 국내에서 자본이 빠져나갑니다.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외환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의 활력이 죽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위축된 투자와 소비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